

“사라진 나의 권리를  
찾아 주세요”

세계장애인의날

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서 싫어요”

“우리아이가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함께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장애인까지 챙겨야 하나요?”



오늘도 장애인들은  
자신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편견 뿐일까요?



“불이 났는데, 왜 피하지 못했을까?”

2014년, 종합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송국현씨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을 거뒀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2등급까지만 제공 되는 현실에,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한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받지 못하자,  
결국 아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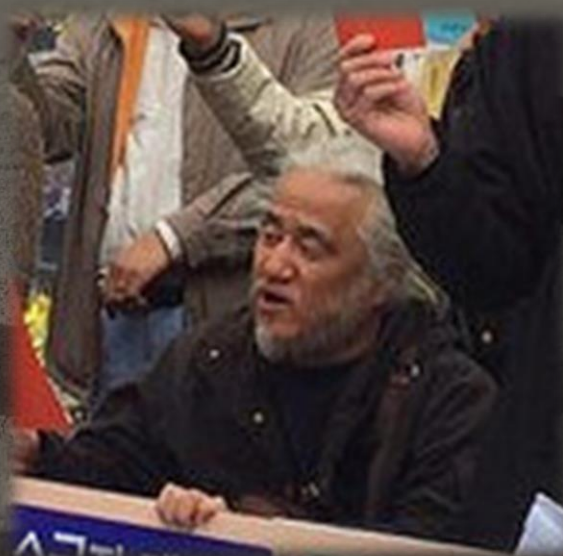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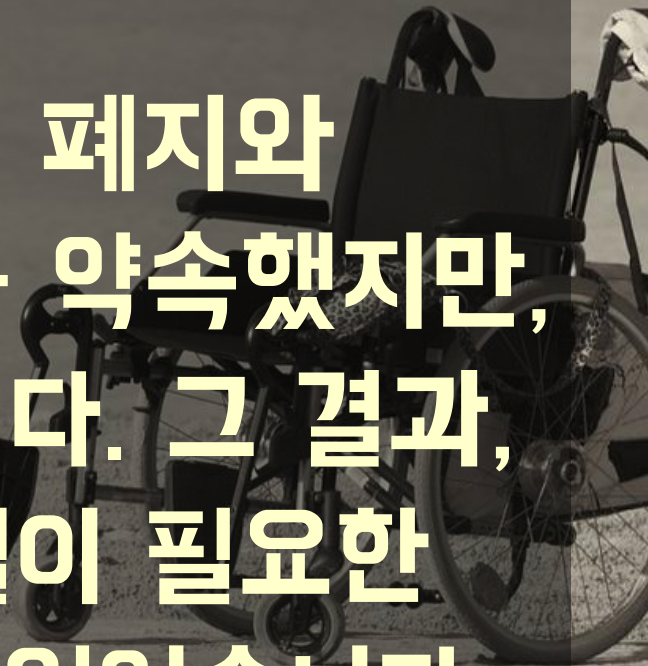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오늘도 장애인들은 광화문역에 모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칩니다.

정부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1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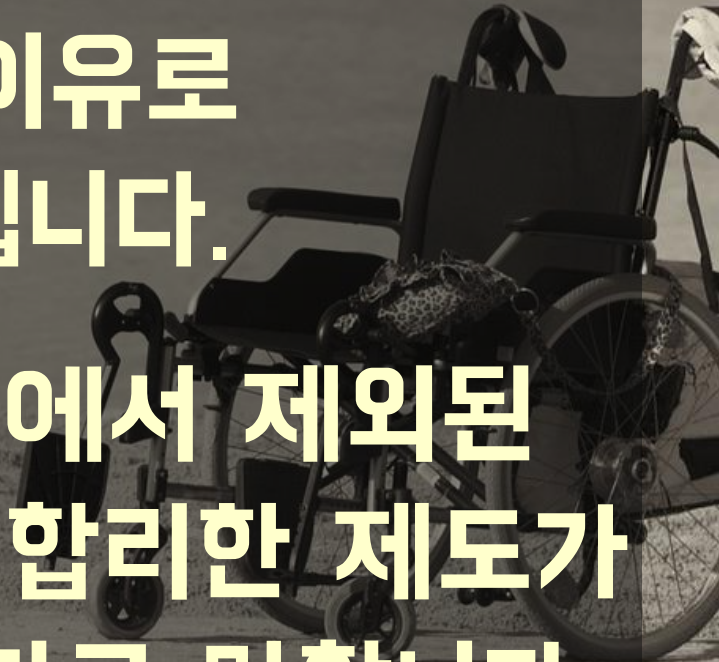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고,  
부양의무제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은 왜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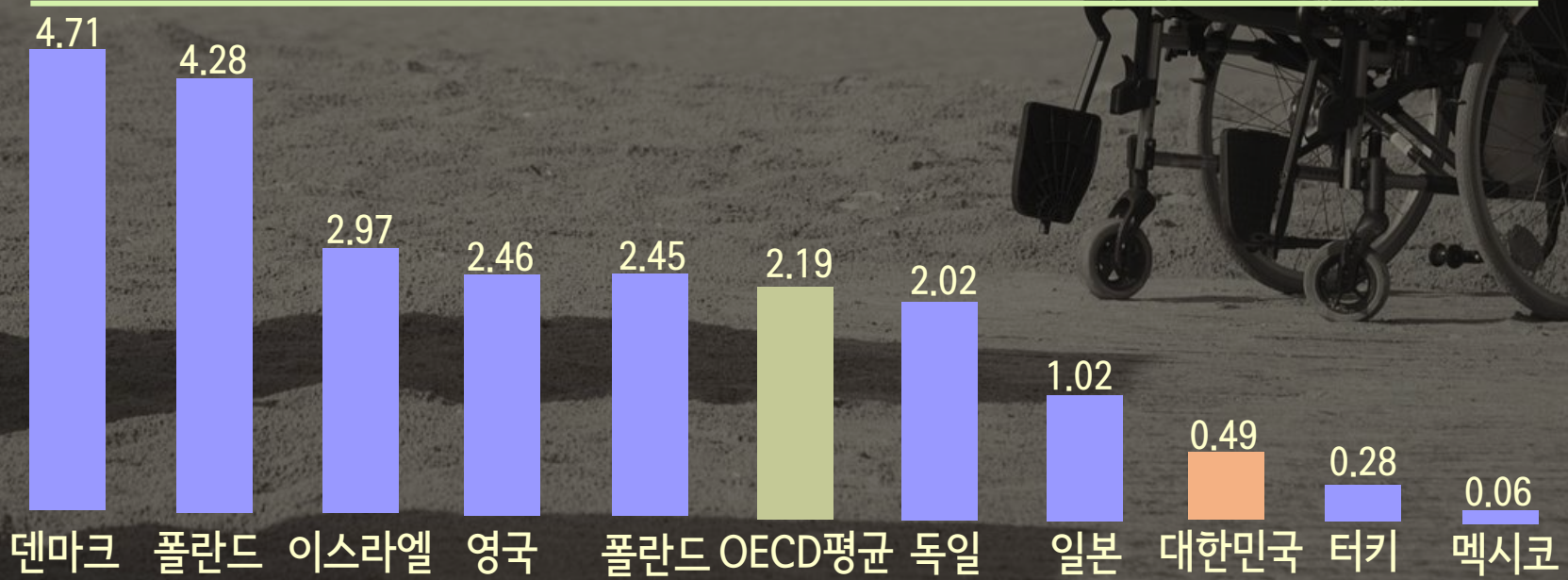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등급에 가로막혀 신청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사망 사고를 불합리한 제도가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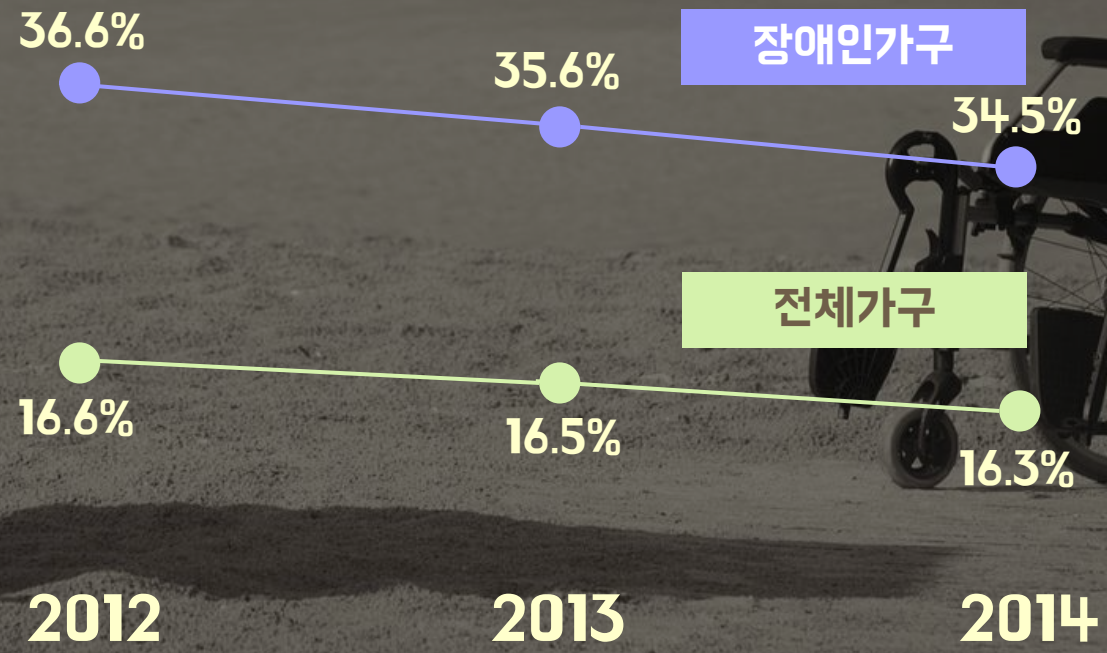


자료 출처: 2015 장애통계연보



# 이렇다 보니, 이들의 빈곤 수준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 가구와 전체 가구 빈곤율



자료 출처: 2015 장애통계연보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복지 선진국에도 장애인 등급이 있지만,  
등급은 지원금 지급 기준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이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노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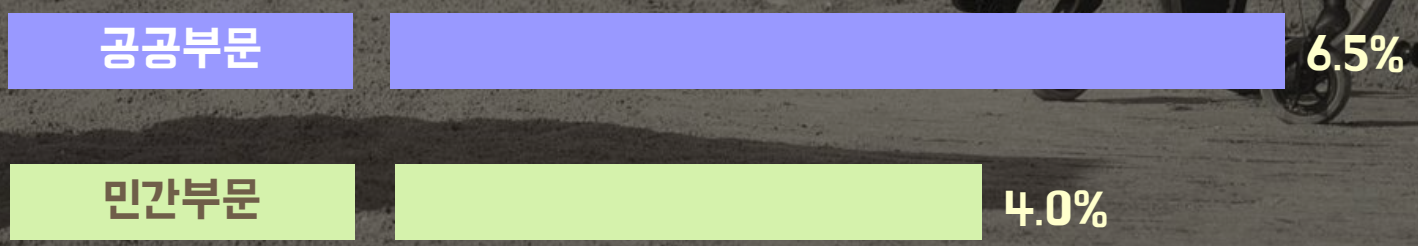
“독일, 중증 장애인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나라”

독일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의무고용률 6%를 준수해야하는데, 고용 대상은 바로 중증 장애인입니다.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장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도 사회와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결과, 2000년 3.7%였던 독일의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4.6%로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일 중증 장애인 고용률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고도 쉽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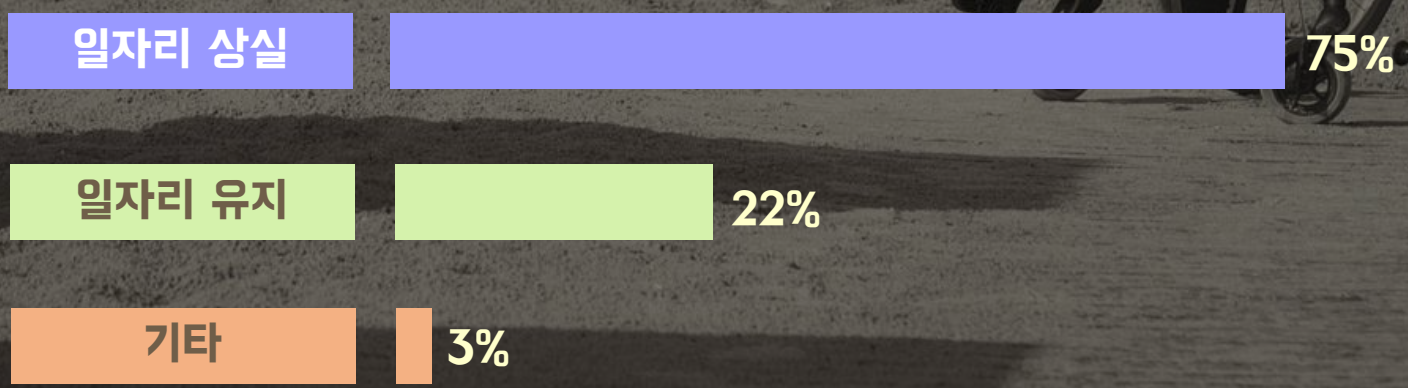
독일에는 해고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면  
고용을 지원하는 통합사무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해고 접수가 들어오면, 통합사무소는  
 중증장애인 사내대표, 해고 대상자,  
 사업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제도 덕분에 10명 중 2명은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고 동의 신청 접수 결과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영국, 장애인의 독립 주거 공간 지원”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 집단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장애인수의 1.01%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규모가 30명 이하는 2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떨까요?



**성인 장애인의 자립을 당연시하는 영국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서비스를 21개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한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살지 않고 독립 공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 주거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레벨 1



- 독립주거지
- 외부 돌봄 서비스

레벨 2-3



- 단지 내 개인별 아파트 (침실, 거실, 주방, 욕실)
- 독립생활 지원 직원


레벨 4



- 건물 내 개인별 가구 (침실, 욕실, 간이주방)
- 공동식사, 24시간 일상생활지원

“우리나라와 다른 두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wheelchair on a sandy beach. The wheelchair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frame, with its shadow cast on the sand. The background shows the ocean and a clear sky.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이제는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세계시민교육 보니파

Bon Idea To Action, Bonita  
[www.ibonita.org](http://www.ibonita.org)



보니파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파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https://facebook.com/ibonita2016)